

업계 “工期연장 간접비 개선·스마트건설 지원 기대”

문재인 정부가 그리는 건설정책 시나리오에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한다.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과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지원, 해외건설 진출 지원 등은 호재로 꼽힌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분쟁의 불씨가 될 만한 악재들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지급방안을 손질하겠다고 약속했다. 현행 규정으로도 공기 연장으로 인해 증가하는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상해보험료 등 간접비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간접

비 산정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 대통령이 공기연장 간접비 지급방안 개선을 예고한 가운데 시장에서는 제3의 전문가관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계약금액 산정 기준과 조정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스마트 건설기술과 해외건설 진출에 대한 지원 등도 문 대통령이 제시한 건설정책 변화의 한 축이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건설기술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해저터널 기술 고도화 등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벤처기업부 신설로 중기청 확대면 공사자재 발주자 직접구매제 따른 시공품질·기술력 저하 등 불거피 징벌적 손해배상제 부작용도 우려

두는 게 핵심이다. 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 글로벌 인프라펀드 확대, 해외진출 금융상품 개발 등을 추진해 해외건설 시장에서 한국 건설의 영역을 넓히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건설정책 과제다. 이처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

하는 정책이 있는가 하면 건설시장을 분점으로 내몰 수 있는 정책도 적지 않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이 대표적이다. 지금의 중소기업청은 공공공사 공사용 자재의 발주자직접구매 제도를 운용하면서 지난 2005년 87개였던 지정 자재 품목을 작년 127개로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이 확실히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제도의 경직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기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확대 개편될 경우 공사용 자재의 발주자직접구매 제도가 시공품질 저하, 기술력 하락 등 건설시장을 더욱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싸고도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건설산업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과징금 제도가 많은데, 일반법 형태로 도입하게 되면 기존 제재와 중복 처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도 가뜰스나 분쟁이 심한 건설시장에서 소송 남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건설정책의 변화에 거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면서 “건설산업의 생산체계가 복잡한 만큼 특히나 제재처벌을 강화할 때는 구조적인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강원권



文시대 주목받는 강원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취임해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감에 따라 강원도내 지역 현안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새정부의 국정 제과제로 선정해 챙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올림픽 시설의 사후 활용 등 올림픽 관련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올림픽 경기장 등의 건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올림픽이 끝난 이후 시설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사후 활용 대상인 시설은 각종 올림픽 경기장 등 13개다. 이 중 11개 시설은 지자체 등이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정선 알파인 경기장과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장은 아직 관리 주체조차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도는 주요 동계올림픽 경기장이

올림픽시설 활용해법 기대
원주엔 헬스케어 국가산단
춘천지역은 레고랜드와 연계
스마트 토이 도시로 조성
폐광지역 발전 방안도 주목

일반인의 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국가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주요 경기장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관리 비용 등으로도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계올림픽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 방안 등에 대해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만큼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 주요 지역개발 사업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춘천을 레고랜드와 연계한 스마트 토이 도시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레고랜드는 지난달 시공사 선정이 끝나는 등 본 궤도에 올랐다. 오는 2019년 상반기로 예정된 개장 일정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원주 헬스케어 산업단지 조성도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이다. 문 대통령은 바근해 정부가 원주 혁신도시에서 산업단지 지정을 제외했다면서 원주를 헬스케어 국가산단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한 상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폐광지역 발전 방안을 약속한 만큼 어떤 대채 산업을 제시할지도 지켜봐야 할 지점이다. 이 외에도 새정부 출범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접경지역인 강원도 경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강산 관광 재개와 철원 평화산업단지 조성, 경원선 복원 등의 추진이 가시화되면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권해석기자 haeseok@

올해 다목적농촌용수개발 대상 ‘원주 손정·고성 토성지구’ 선정

(신규착수지) (기본조사대상)

국비 367억원 확보

올해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강원도 원주 손정지구 선정됐다. 고성 토성지구는 기본조사 대상 지구로 뽑혔다. 도는 농업용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삼기 지역의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정부의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도가 권의 2개소가 모두 사업대상지로 선정돼 36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주 손정지구는 저수지 유역면적이 작고 담수량이 부족해 매년 용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이다. 이 때문에 남한강물을 양수해 저수지의 담수량을 증대하는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건의했고, 지난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된 바 있다. 도는 올해 4월 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사업의 시급함을 설명해 올해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됐다. 양수장 2개소와 송수관로(0.94km), 용수로(10.3

km) 등을 건설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183억원이며 전액 국비가 지원된다. 도는 올해 50억원을 투자해 실시계획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선정된 고성 토성지구는 도합저수지의 수량은 풍부하지만 지역간 수계 연결이 되지 않아 가뭄 때 다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도는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해 양수장 신설과 송수관로를 개설하는 계획을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와 함께 수립했다. 토성지구의 총 사업비는 184억원이다. 양수장 2개소와 송수관로(3.4km), 용수로(3.3km) 등이 건설된다. 도는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신규 지구 국비 확보로 매년 고질적 물 부족 사태를 겪는 상삼기 지역에 안정적 용수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손정지구의 실시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에 조가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매년 전국에서 5개소 정도를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기본조사 지구로, 기본조사가 완료된 지구 중 6개소 정도를 신규 착수지구로 선정하고 있다. 권해석기자



전남권 원주지방국도관리청장(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소상공 건설공제조합 채권관리실장(앞줄 왼쪽 첫 번째) 등 관계자들이 '영월~방림2도로 건설공사' 개통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영월~방림2 도로 역무이행으로 완공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박승준)은 강원도 영월과 평창을 잇는 국도31호선 '영월~방림2(11.24km) 도로건설공사' 현장을 역무이행해 완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6년 2월 착공했지만 10년 이상 지난 장기공사로 조합이 신속하게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했다. 총사업비는 1099억원 규모이며 도로 완공으로 운행시간이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됐다. 내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도로망 개선사업의 일환이자, 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합이 보증한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보증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적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